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미나 자료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발전전략

2008. 3. 6.

김영수 [지역산업팀장]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목 차

I.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II.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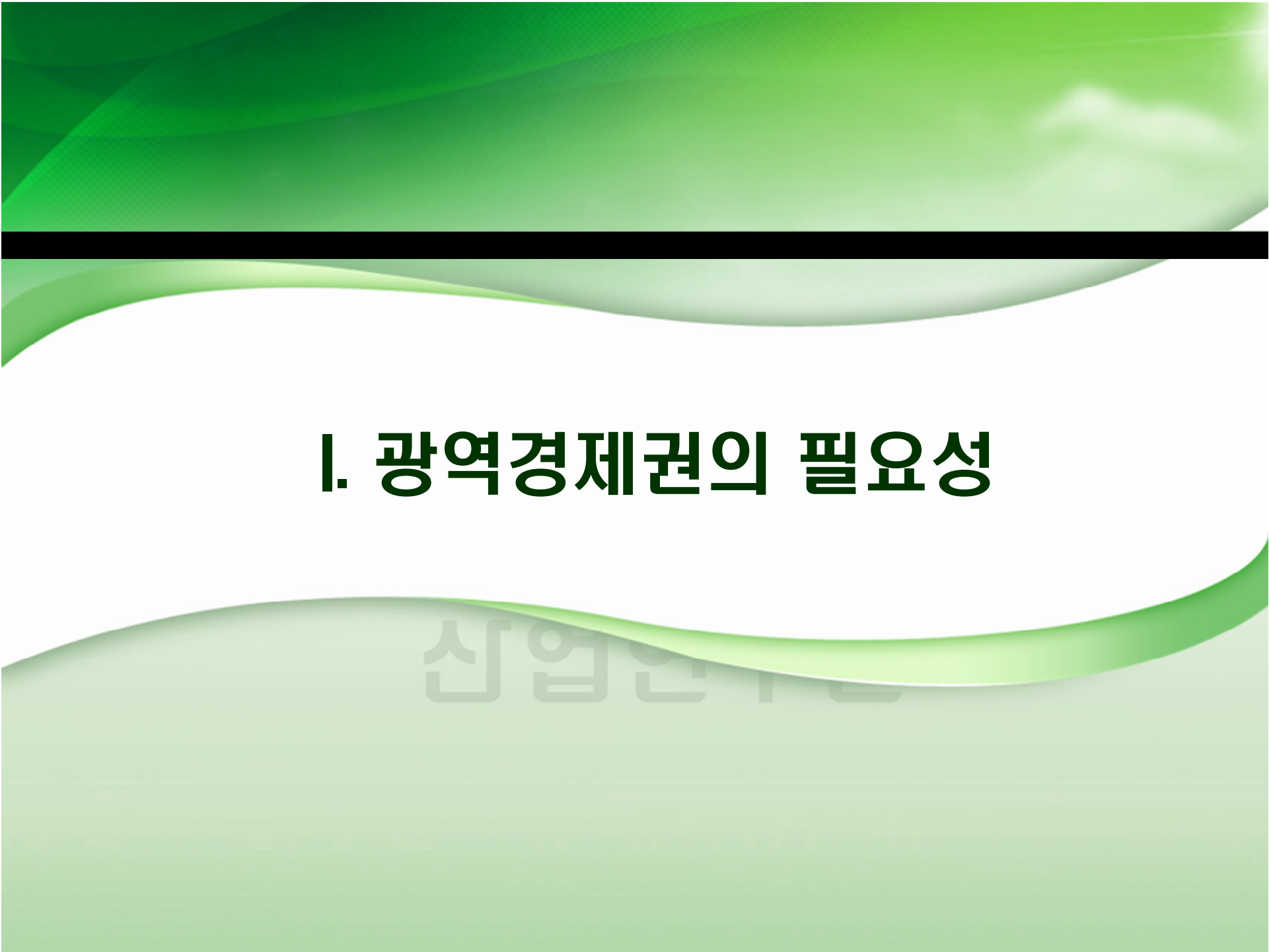
III. 광역경제권 발전 기본구상

IV.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방향

V.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VI. 추진체계 구축 방안

VII. 기대효과



I.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산업연구

1. 왜 최근 광역경제권인가? [1]

광역권은 국토계획의 고전적 주제

- 광역권의 개념 :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지역
- 광역권과 같은 기능지역(계획지역)의 설정은 행정구역의 고착성 때문에 불가피
 - 광역도시권 설정, 광역 SOC 설치, 광역행정기구, 광역권 계획 등의 문제

국토계획에서의 공간적 단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2001]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	제4차 국토계획 수정 [2004~2020]
4대권, 8중권, 17 소권	28개 지역경제권	9개 지역경제권	· 10개 광역권 · 6개 국토축	7+1 경제권역

1. 왜 최근 광역경제권인가? [2]

광역경제권의 경제 산업적 배경

- 세계화, 지역의 주요 경쟁단위 부상 →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필요
- 지식기반경제(산업) 전환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 중요. 도시[지식창출]와 인접지역[지식활용]간 긴밀한 연계 필요
- 산업의 융합화 추세 → 도시의 서비스산업과 인접지역의 제조업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와 지역의 자율성 중요

광역경제권의 핵심

중추도시와 인접지역(광역도)의
경제 산업 측면 협력·연계·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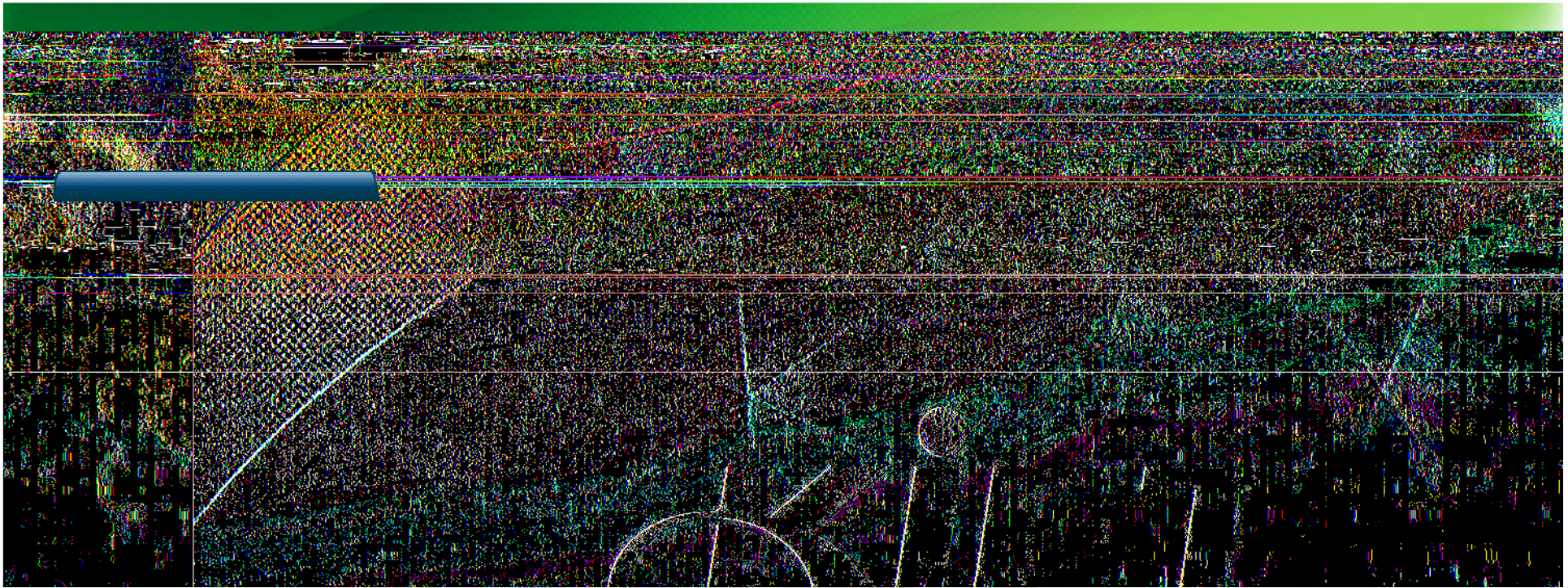


-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활성화
-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2. 정책과 이론의 최근 동향

정책 기조 : 신지역주의로의 전환

	전통적 지역주의	신지역주의
경제적 배경	- 포드주의, 규모의 경제 추구 -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초한 고성장시대	- 경제의 세계화 - 지식기반의 유연생산체제 - 경쟁력 있는 집적경제단위로서 지역의 부상
정책 목표	-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 - 지역간 형평성, 재분배 강조	-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형 발전 도모 - 세계적 경쟁거점 구축
주요 정책	-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조세 감면 - 산업의 지역간 재배치 - 부문별(sectoral) 정책	- 지역의 혁신환경, 기업간 연계 강조 -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원 - 지역에 근거한(regional based) 통합적 정책
추진 체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체계	- 민간-공공의 협력적 거버넌스 - 지역의 자율성 증대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산업연구원

지역공간 단위 : Global City-Region의 대두[2]

Global City-region의 핵심 동력

- 광역지역(region state 또는 city region)이 기업경쟁력의 창출과 조직의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
 - 적정 규모: region state(오마에 겐이치) 인구 500만~2000만명, city-region 800만~1200만명 등
- Global City-region의 핵심적 동력: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와 효율적인 지역혁신체계의 존재 유무에 의존
 -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각종 지원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공간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집적
- Global City-region의 산업클러스터 이점
 - 세계도시지역 경제시스템(혁신체제)의 전반적 효율성을 보장
 - 생산자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창의성과 학습 및 혁신이 강화 → 생산성 향상

II.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산업연구원

II.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1]

지역정책의 기초 변화

- 형평성, 지역 안배, 지역간 발전 격차 완화 → 효율성, 경쟁력, 글로벌 경쟁거점 육성 강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 →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 차원에서 접근
- 수도권 규제 중심에서 탈피 →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경제권 육성 지원

정책목표 변화 : 글로벌 경쟁거점 지역 육성

- 시도 단위 자립적 발전 지향 → 경쟁력 있는 세계적 성장거점 지향
- 행정구역 단위의 소지역간 경쟁에서 탈피 → 세계 경제 내에서 해외의 경쟁거점과 경쟁
- 산업, R&D, 인프라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갖도록 초광역 수준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

II.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2]

Hub-Spoke형 중층적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향

- 13개 시·도의 기존 전략산업(52개)은 위상에 차이가 없는 단층적 구조
- 세계-국가-지역 단위의 허브클러스터 구분 및 Hub-Spoke 클러스터간 중층적 연계구조 형성
- 경제권역 단위의 핵심적 전략산업 Hub Cluster를 선정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육성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방식의 변화

- 지역간, 정책간(산업-R&D-인력) 분절 또는 연계 미흡 지양
➔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유관 지역간, 정책간 통합·연계 강화
- 소지역 차원의 혁신인프라(특화센터 등) 구축 사업 중심
➔ 기존 혁신인프라간의 네트워크, 기능 분담, 연계 강조
- 제조업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중추도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
- 광역지자체간의 협력과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III. 광역경제권 발전 기본구상



산업연구

1. 광역경제권의 설정

광역경제권 설정 기준

- 노동시장 형성 (인구규모, 통근권), 중추도시와 성장거점의 존재, 지역적 동질성 (지역간 협력 가능성),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역사성(지역과 정책의 양측면)
- 정책추진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접한 광역행정구역 단위로 설정

5+2 광역경제권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 (대구, 경북), 강원권,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별도 고려
 - 강원은 지역의 희망시 대구·경북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결합 고려

2. 발전 목표

〈최종목표〉

5대 광역경제권을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중간목표〉

비수도권 지역 광역경제권을 수도권 수준의
글로벌 경쟁거점지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및 혁신 기반 확충에 주력

〈정책과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체제 구축

- 전략산업중심의 초광역 클러스터 형성
- 전략산업과 연계한 R&D 기반 강화
- 경제권역내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의 중추관리기능 강화

-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행정, 경제, 교육·연구, 서비스산업 등 거점기능 강화

국제 인프라 정비 및 확충

- 광역경제권별로 공항, 항만 등 글로벌 접근성 강화

민간-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및 제도 기반 구축

- 글로벌 허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
- 인접 시·도간, 공공-민간간 파트너십 활성화

3. 추진전략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에 집중

- 광역경제권 기능지역 설정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한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 기존 지역정책(지역산업 진흥, 지역혁신사업 등)과 연계

단계적 접근

- 광역경제권별 핵심역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세계적 경쟁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

민간-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산업클러스터와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
- 추진주체의 기능: 기획기능, 조정기능, 평가기능에 집중. 사업집행은 사업내용별로 유연한 형태의 사업단을 설립하여 시·도간 협력하에 추진
-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중심의 추진기구 지원 역할에 충실



IV.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과 방향



산업연구

1. 수도권

발전 비전

-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IT, BT가 융합된 세계적 경쟁거점으로서 동아시아의 선도적 경제권으로 도약

수도권 산업발전 전략

핵심산업

발전전략

국제금융 ·비즈니스

-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 아태본부 등 유치

국제물류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종합물류시스템 구축
- 인천·평택 경제자유구역의 연계 발전, 인천항·평택항의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등 IT

- 경기의 IT-LCD클러스터 연계 강화
-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바이오(의약)

- 서울, 인천(송도), 경기도에 산재한 연구기관과 생산기능을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2. 충청권

발전 비전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광역권의 전략산업 연계를 통해 동북아의 실리콘벨리로 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창·오송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국제적인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 **오창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추진 및 IT 및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육성

중부권 산업발전 전략

핵심산업

발전전략

바이오

- 대덕의 R&D기능과 오창, 오송의 생산기능 등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거점으로 육성
 - 대전 및 오창은 생명공학, 홍성, 예산, 청양, 논산은 농축산 바이오, 금산은 인삼 등에 특화

전자정보

- 천안·아산에 집적된 전자정보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천안-연기-세종-공주-부여를 연계한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3. 대구·경북권

발전 비전

- “전자정보기기, 지능형자동차부품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거점 구축
 - 세계 일류상품과 미래지향적 제품 생산기능을 연구개발기능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경제권역 형성

동북권 산업발전 전략

핵심산업

발전전략

전자정보기기

- 구미의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대구의 모바일S/W,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을 연계하여 발전

자동차부품

- 구미의 IT와 대구-경산-영천-경주-울산으로 연계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로 육성
 - 대구의 DGIST, 포항의 지능로봇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등 연구개발시설을 활용

4. 동남권

발전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계산업 클러스터 구축”
 - 권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시·도별 특화와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선도지역 조성

동남권 산업발전 전략

핵심산업

발전전략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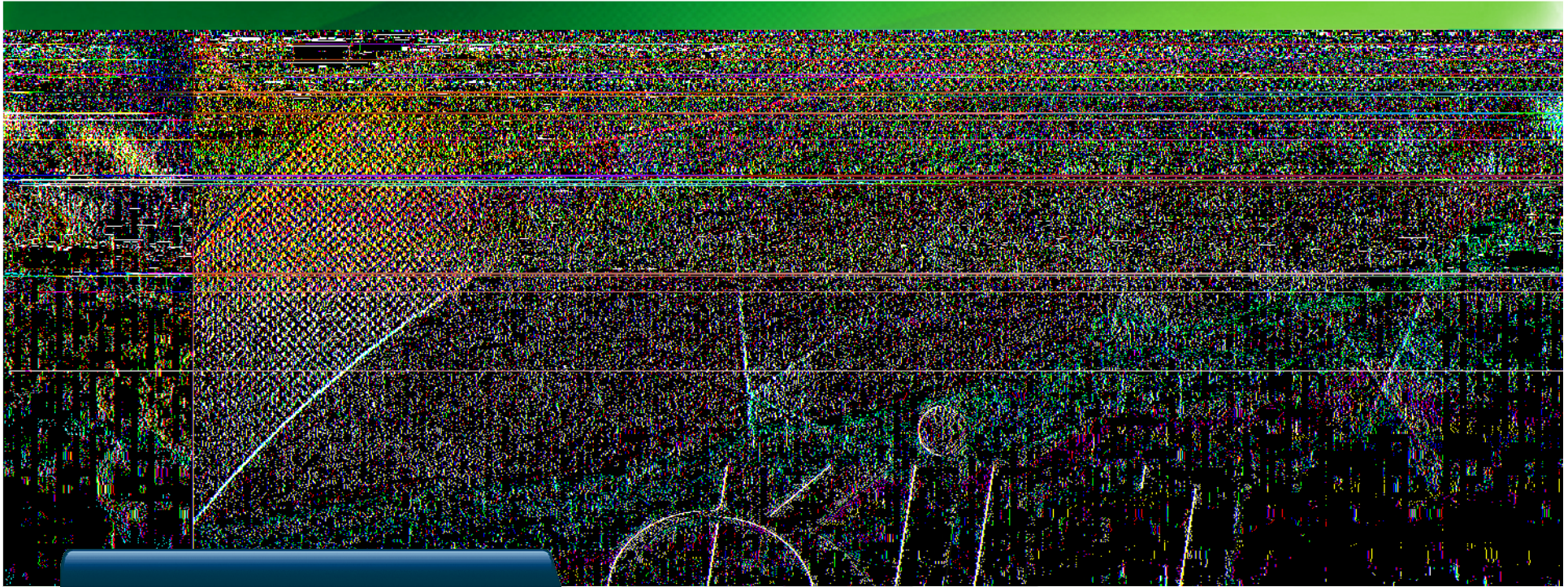
- 모듈화 부품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고기능성 자동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력 강화

조선

-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유지
-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기계

-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위상 강화
-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산업연구원



V.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산업연구

1.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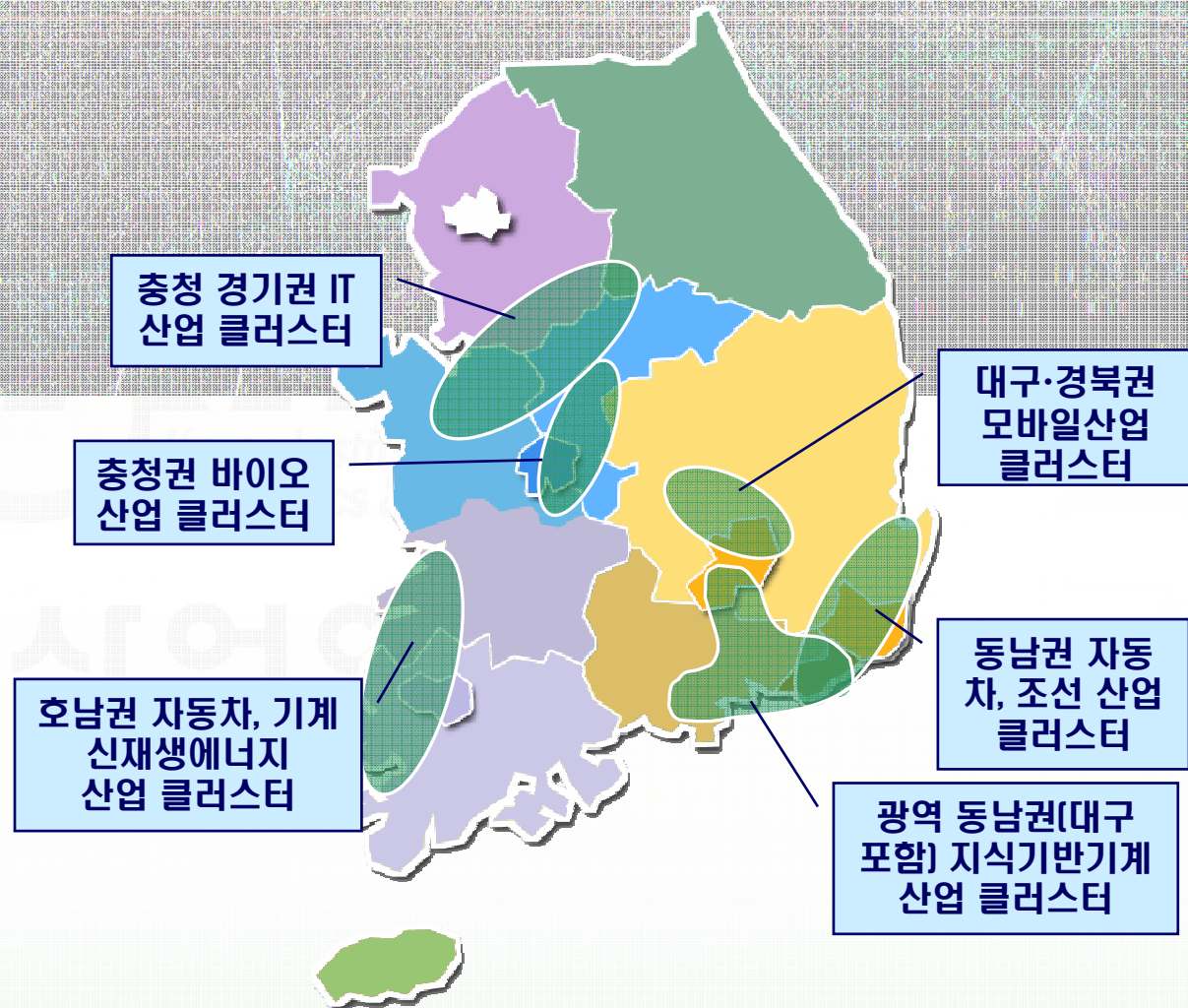
글로벌 경쟁거점사업 추진방안

- 공모 방식 선정: 광역시·도간 협의체 또는 독립적 사업단이 글로벌 경쟁거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심의하여 선정
- 지원대상 지역 및 산업은 축소하되 개별 사업규모는 대폭 확대
- 세계적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사업 발굴: 허브형 혁신지원센터, 전략기술개발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및 핵심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준포괄 성과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및 성과목표 관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예시)

선정 기준

- 전략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 수출액 및 비중
- 세계적 핵심기업 존재 유무
- 관련 기업 및 연구인력의 집적 정도
-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의지 등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육성사업 기대효과

-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생태계에 맞는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시·도간 전략산업 중복문제 해소 및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 전략산업 클러스터 지배력 증대

[전국대비 비중]

		수출 비중 (2006)		종사자수 비중 (2005)		부가가치 비중 (2005)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부산	1.5	38.1	4.1	33.3	3.9	36.5
	울산	32.8		19.0		26.5	
	경남	3.8		10.2		6.1	
충청권 IT산업	대전	0.8	23.6	0.8	15.1	0.4	15.6
	충남	16.7		8.6		10.8	
	충북	6.1		5.7		4.4	
대경권 전자정보기기	대구	0.5	22.3	1.3	13.9	0.8	29.9
	경북	21.8		12.6		29.1	
동남권 기계산업	부산	2.4	24.9	7.1	27.7	5.1	30.7
	울산	4.4		1.7		1.6	
	경남	18.1		18.9		27.0	
호남권 자동차산업	광주	6.8	13.6	4.2	10.1	5.5	11.5
	전북	6.8		5.7		5.9	
	전남	-		0.2		0.1	

2. 광역경제권의 자율적 혁신체제 구축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적정 공간단위로서의 광역경제권

- 기존 시·도단위의 자기완결적 혁신체제 구축으로부터 탈피
- 중추도시를 포괄한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 필요

광역경제권별 혁신체제 구축 주요사업

-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통해 혁신체제 구축의 구심점 형성. 기초연구개발 분야 강화, 창의적 기술의 창출 거점 역할
-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각 권역의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R&D특구 확대 지정, 전략산업과 연계된 응용기술 및 사업화기술 분야 집중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광역경제권별 예산 배분을 통한 경쟁과 효율성 제고

3. 연계·협력사업 프로그램의 강화

지자체간 연계·협력 유도

- 경제권역내 인접 시·도간 협력사업 또는 공동운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 예산의 일정비율(예: 20%)을 협력사업에 배정
- 지자체간 사전 협약을 전제로 광역경제권간 경쟁방식을 통해 지원
- 지자체간 협력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최대 80%)

기존 사업·기관간 기능의 특화 및 연계강화

- 지역내 다양한 혁신지원기관(RIC, 특화센터, TP, 창업보육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간의 기능별 특화, 연계 및 역할 분담, 통폐합 등 추진
➡ 전문화, 규모의 경제 추구, 성과 제고
- 혁신지원기관간 경쟁을 통한 Hub 지원기관 선정 및 집중 육성
- 부처간, 부처내 유사사업들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조정

4.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입지 특징

- 고급인력의 밀접한 상호작용, 정보화 기반, 대도시의 복합성, 산업의 다양성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좋은 환경 제공 ⇒ 대도시로 산업의 재집중화가 전세계적 경향
- 중추도시의 경쟁력이 광역경제권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

주요 정책 과제

- 중추도시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S/W, 전문비즈니스서비스, 금융, 컨벤션, 문화콘텐츠 등) 집중 육성
- 거점 명문대학 육성, 자녀교육 여건 개선, 문화·위락기능 확충 등 고급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 도시(혁신도시 포함) 및 배후지역간 기능별 특화에 기반한 네트워크 도시화
- 초광역단위 공항, 항만 등의 확충을 통한 국제적 개방성 확대



VI. 추진체계 구축 방안



산업연구

1. 기본 방향

기본 방향

- 민간주도의 조사·기획·집행, 공공부문의 지원·조정 등으로 역할 분담
→ 지역·민간중심의 추진체계,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 권역내 총체적 완결성 지향은 지양 → 광역경제권 내부의 혁신자원 발굴·활용을 전제로 부족한 자원은 국내외 연계를 통해 개방적·글로벌 확충
- 광역단위 추진사업의 특성(공공성·수익성 정도, 공간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식(공공, 민간, 제3섹터 등) 다양화
- 광역경제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주체(기업, 대학, 혁신기관 등)의 사회적 합의하에 자발적 참여유도 및 점진적,단계적 추진
- 부처별·지자체별 분리 추진되는 정책들을 패키지(package) 정책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

2. 추진 조직

중앙 추진조직

- 지역 자율형 '지역본부' 체제 : 행재정권의 부여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
- 단계적 접근
 - 단기 : 전문성, 창의,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프로젝트 사업단** 위주의 **유연한 조직체계** 운영(전략산업기획단, TP의 조직·인력 활용)
 - 중기 : 제3섹터형 독립적 지역발전기구(RDA)로 확대·운영
 - 장기 :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한 조직체계 구성
- 프로젝트 사업단 :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조직의 수·유형·추진방식 등 다양화
 - 주요기능 : 광역권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 공동연계사업의 발굴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 사업협력 및 평가체계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촉진 등 담당

3. 관련 법·제도 정비

관련 법·제도 정비

- 관련 법령 정비: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및 기획단의 구성·기능·재정 등에 관한 법제도 마련(관련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
- 재정운영체계 구축: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및 지출에 대한 운영시스템 구축(예: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
- 평가체계 구축: 중앙단위·광역단위의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시범 선도사업의 추진: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상호학습 및 활성화 방안 모색



VII. 기 대 효 과



산업연구

1.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과

광역경제권 접근에 따른 기대효과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한 자율적 경제권 형성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체계 복원,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간의 연계 강화
-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클러스터)에 맞는 행재정적 산업지원체계 구축 ⇒ 중복투자 최소화,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등
-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다변화된 지속가능한 성장엔진 확보
- 복수의 국가적 성장거점(growth pole) 확보 ⇒ 광역경제권 정책은 국가성장 전략(강소국 모형 vs 강중국 모형)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